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462
----------	-------

발의연월일 : 2025. 5. 9.

발 의 자 : 장경태 · 김동아 · 권향엽
조계원 · 김문수 · 서영석
민형배 · 김영환 · 정일영
서미화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에게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관한 권한 및 역할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대통령권한대행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 기획재정부장관, 주무기관의 장 등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그 권한의 정당성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의결되어 그 권한이 정지되거나 탄핵결정이 되어 파면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사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임명 절차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 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인하여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어 대통령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 임명의 국회 소관 상임위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기업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6조의2(공기업 및 준정부기관</u> <u>임원 임명에 관한 국회 동의)</u> <u>제25조 및 제26조에도 불구하고</u> <u>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u> <u>의결로 인하여 그 권한행사가</u> <u>정지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u> <u>결정에 의하여 파면되어 대통</u> <u>령권한대행이 그 권한을 대행</u> <u>하는 경우 공기업 및 준정부기</u> <u>관 임원의 임명은 국회 소관</u> <u>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u> <u>한다.</u>